

여수산단, 화학사고 안전보장 요구

환경오염 및 안전문제로 건의서 제출 ...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절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정부에 건의됐다.

여수상공회의소는 8월13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여수상의는 “여수국가산단은 화학·정유·비료 등 260여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2012년 100조원의 생산실적과 385억달러 수출고를 기록했고 6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안전문제 등으로 집단행동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수상의는 “특히 최근 여수산단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도 빈발하고 있다”며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마을 중에서도 해산동과 주삼동 일부지역 마을주민에 대해서는 건강 역학조사 및 이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등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14>